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

■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보통 때는 부처별로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저까지 포함해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가 모두 총출동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정책하는 사람 생각 중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수요자 중심 정책 해보자 해보자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앞에서 그럴듯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시험 치는 날입니다. 우수상을 주시면 좋겠고 정 그리 안 되면 노력상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땐 진보상이 있었는데 우등 아니라도 전보다 좋아지면 진보상 주고 그랬습니다.

진작 좀 하지 왜 말년에 하나 그러는데 사실은 정책을 해보니까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모색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또 걸립니다.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려면 정부 각 부처 안에서도 이해관계 대립이 있습니다. 부처의 이해관계가 있고, 전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 옳은데 왜 바꾸려 하느냐는 견해의 대립도

있고요. 그것도 조정해야 하고요.

부처 간·행정수요자 간 이해관계 탓에 긴 과정 거쳐야 정책 나와

부처 간 갈등 뒤에는 흔히 행정 수요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한 기득권도 있고 낡은 기득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금방 갑니다.

국회 보내 입법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부처 간 이해 조정할 때 한 번 이해 조정하는데 국회 가서 또 한 번 변화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도 있고 보기 따라 표도 있고요. 거기서 한 번 더 제2차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년, 3년 가는 것이 예사입니다. 물론 국회까지 안가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쉽게 해치울 수 있는 일들도 있긴 있습니다. 뒤에 부작용이 없게 하자면 최대한 검증 재검증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해왔는데 저희가 본 관점으로는, 균형 발전을 1960년대부터 균형 발전 말만 들어왔는데 계속 악화되기만 했지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중소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어렵다고 한 중소기업 정책, 참여정부가 해보자고 시도한 것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 노래를 불렀고 모든 정당이 중소기업 노래를 불렀는데 매번 어렵다는 아우성이 쳐진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더 나뻐을 텐데 그 정도로 유지하는데 모든 정부가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위가 역전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자주 국방 한다는 것도 20년 전부터 논의된 건데 막상 할러니까 저항도 있습니다만, 노래는 부르지만 근본적 변화가 안 된 것에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자세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해왔는데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정책을 하려고 보니 대개 이 정책을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 이익을 보는지 측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초 통계가 없을 만큼 부실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초통계도 없을 만큼 부실해 통계조사부터 실시

대통령이 통계 수치를 보자고 이야기하면 통계 수치를 잘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대개 통계가 우리 짐작이나 감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동안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하자, 20년 동안 노래 부르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생각과 함께 근거를 갖고 하자고 통계 자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000건 1만 건이 넘는 전수 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고 안 하고 왜 이제 보고하느냐는데 투입 지표도 조사 분석한 통계 지표도 분석이 됐고 보통 정책성과는 5년, 6년 이후 나타나는 것이지만 약간의 변화의 기미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소위 산출지표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투입지표 뿐 아니라 산출지표를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 시간이 축적이 되기 전인 2005년까지 '제도를 바꾸었습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 산출 지표가 나와 수요자, 고객들에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어쨌든 성과 지표를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보고를 받아 봅시다.

토론 참여하고 가차없는 비판해 주면 정책 발전에 도움 될 것

토론에 참여해보시고 가차 없는 비판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말씀 받고 그러는데 미리 제출된 질문 말고 현장에서 할 말 있으면 과감히 신청해주시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 아니라도 말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탄없이 현장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보고 느낀 것을 정책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놓을 테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답은 적실한 통계, 정태적 통계만이 아니라 변화해가는 동태적 추세 지표를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책은 품질이 좋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참여를 통해 협조 해주시고 결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시간을 더 썼기 때문에 저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한 분 말씀 더 듣겠습니다. 온라인 e비즈니스 지원 개발 과정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중기청에 주시면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중삼중의 감사 받지만 손해보는 쪽이 언제나 이의 제기

두 번째 학생, 벤처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을 하나 변명해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는 이중, 삼중, 사중의 감사를 계속 받습니다. 자체 감사 받아야 하지요.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합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할 때,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 없이 문제를 제기하지요. 국회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요. 또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는 한쪽의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때 손해를 보는 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며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쪽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규범을 만들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요건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범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을 중기청에 제안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인연인데, 특별히 검토하겠습니다.

보통 정책 건의에 대해선 원체 건의가 많아 딱 감이 안 잡히면 검토과정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두 분 말씀은 대통령과 특별히 인연이 있으니 자세히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께서 말씀하셨고 관계부처 책임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운영의 투명·공정성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국가 정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정부 조치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시대라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하고, 거기에 맡겨놓아서 성공할 수 없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시장에 맡기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을 요새 사업에 맡기고 있긴 하지만... 부모들도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성과가 불분명하고,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가 불

분명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랄지, 대가관계를 바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대가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는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시장을 형성해서 시장에서 경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 대가로 받아야지 정부가 임의로 선택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나뉘지면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성격 달라져...시장에 맡길 수 있는 것 최대한 맡겨야

참여정부 정책이 달라졌나 묻고 싶은데, 이 점에서 성과가 아니라 성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맡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지원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수급 기업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정된 대상에게 가는 것입니다. 펀드에 투자할 때,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건 전문가가 하는데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선택한 그 패에 따라 건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는 이 방식으로 가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순 없죠.

중소기업은 부동산이 없어서 은행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신용만 보고 해줘야 하는데 신용은 거래 실적입니다. 과거 실적도 없다 부동산도 없다, 있다는 게 신제품뿐인데 기술적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에서 먹여줘야 할 것인데 누가 판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 기술인증서만 갖고 시장에서 성공 보장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가장 불만이 왜 기술보고 투자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쪽 기술 인증서만 내놓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 기술보증 이쪽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옛날에는 행정적 방식으로 행정부에서 인증서를 지정했습니다. 너 벤처 기업이다, 지정했고, 너 우선 기업이다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하지 말고 은행은 자기 돈을 거는데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이고 위험 부담을 높이 지는 것은 은행입니다. 정책적으로 위험 부담을 높게 하더라도 결국 경영 성과와 관련 있어 그 사람들은 좀 시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정 기능을 공무원에서 뺏아서 금융기관에 넘겼습니다. 기술판정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시장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업성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떼이면 자신의 근무 성적, 경영 성적... 모든 것이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 평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분 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그런 평가 말고 소신껏 해 봐라라고 하고 싶은데,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에 국민들이 용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이 없습니다.

금융기관도 책임감·자부심 갖고 도전적 분위기 만들어주길

화끈하게 해보시오, 국가 미래를 어깨에 짊어졌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해보자는 것이죠. 거기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최고 수준의 사람을 확보로 하려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실이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만에 하나 정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은 많이 투명해졌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이와 같은 기술기업의 길을 열어주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신뢰가 높아지면 감독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일선 구매 담당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 주면 감사 없는데 해주면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기준을 바꿨죠. 해 준 것은 감사하지 말고 안 해 준 것은 왜 민원 거부를 했는지 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많이 바꾸었는데 그래서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중 하나가 아마 지자체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오포 택지 개발 사건인가 하는 것인데, 그 주택 단지 개발에 지자체에서 거부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왜 안 해주었냐고 감사원이 다 따져서 승인 처분이 됐는데 그게 뒤에 큰 사고몽치가 돼서 참여정부 게이트가 될 뻔했습니다. 아마 국감도 하자 하고… 참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안 해 준다고 감사하니 안 나갈 놈이 나가고, 해준 것은 의심이 되고…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이든 공직자든 신뢰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문제에 있어 진실에 가깝게, 소신에 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숙제입니다.

한국사회 투명·공정 많이 높아져…중기시장에서도 노력할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많이 규범에 합치하는 사

회, 투명성이 상당히 높은 사회, 대개 경쟁의 조건에서 공정성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이 힘에 있어 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 감독을 통해 하는 것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다시피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기관에서 모든 금전 거래, 모든 계좌를 다 추적할 수 있기에 금전적 부정은 여간해 어렵습니다.

그래도 친구 봐주는 건 찾기 어렵습니다. 안면 계좌 추적은 안 되는데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긴장, 실력으로 성공하겠다는 긴장 이런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중기특위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생긴 기구입니다.

왜 위원회가 많냐, 오늘 여러분이 보고받은 이 정책이 가짓수가 수십 가지인데, 이 정책이 여러 부처에 두루두루 퍼져있다. 특히 공공구매 확대 같은 정책은 전 부처 전 기관에 전부 감시를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절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한 부처가 주무 부처가 되어 타 부처를 끌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도 모든 정책 새로 할순 없어...있는 것 토대로 바꾸는 것

그래서 중기특위가 앞에 대통령 직속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꺾발이 많이 죽었지만 정부에선 말발이 쉽니다. 그렇다고 으박지르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조정·통합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없으면 정부가 안 된다. 감히 단언하건데 중요 위원회 몇몇을 묶어 버리면, 손발을 잘라 버리면 통합적 정책이라는 기능은 감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호의적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말년에 자꾸 왜 계획이 나오느냐고 핀잔을 받는데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모든 것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토대로 바꿀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의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 큼직큼직한 개혁 과제들이 많아서 본격적으로 못했고 참여정부 들어와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 정권이 모든 정책에 대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다보니 변화가 필요할 때 참여정부가 만나서 손질한 것이지, 또 다음 정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의 것을 대개 계승해 나가게 됩니다. 교육 정책은 문민정부가 94년에 시작해 98년에 완성시켜 준 교육개혁안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그 기조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문민정부에서 4년간 쪽 다듬어 온 것이 그대로 가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쪽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것이지만 안 바꾸고 싶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98년 2월 교육부 장관이 서명한 교육 개혁 백서가 지금도 교범이 되고 있습니다. 말년까지 계획 착실히 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에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각당이 피가서 대선에 공약도 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 열심히 하라고 박수 좀 쳐 주십시오. 오늘 보고 중 한 가지는 지적해야겠습니다. 2030년에 세계 8, 9위권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11위인데, 1인당은 23위입니다. 1인당은 앞으로 10위가 목표인데 전체 총량은 사람 숫자로 곱하기인데 브라질 1억8천만, 인도 10억, 중국 12억이죠.

이 사람들이 연 8, 9% 성장해서 게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 가면 8, 9위에서 자칫하면 11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강국이 되도 강대국이 아니라 강중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꽤 속독인데, 오늘 보고서를 쭉 건너뛰면서 빠른 보고를 했는데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보통은 미리 보고 나오는데, 미리 못 본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좀 보시고 이해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 이태리 방문을 했습니다. 이태리 총리가 어느 나라 미디어랩이라는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과학기술 혁신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한국이다, 미디어랩이라는 연구소가 미국 MIT에 있는 연구소인데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꼭 이태리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과학기술 진보의 혁신, 수준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첨단만 이렇게 잘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역량이 이렇게 가야 진정한 의미의 강국이 됩니다.

똑똑한 국민이든 경쟁 낙오되는 국민이든 모두 국가의 인적자원

한 사람이 1만 명을 벌어먹이는 시대라 엘리트를 교육해야 하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첨단기술, 승자독식의 시대지만 국민 일반의 보편적 수준, 경쟁에서 좀 낙오했다고 하는 국민의 수준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총량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의 자원도 인적 자원이지만 가장 뒤처지는 사람의 역량도 인적 자원이다. 전체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030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 그 사상적 핵심은 보통사람, 뒤떨어진 사람 포함해 전 국민의 역량을 세계 최고로 밀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태리 총리에게 당신네 나라 1등 상품은 350개인데 우리 1등 상품은 50개 밖에 안 된다, 하니까 이태리 총리는 우리 똥단배 100개 팔아도 당신 나라 큰 배

한 대 파는 거 못 미친다고 서로 추켜세워 줬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
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태리 총리 만날 때는 개수로도 상대방 추켜올리기 곤란하
도록... 이것이 여러분 어깨에 달린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